주력사업 지휘권 분리… 로봇 등 미래사업에 최고경영진 집중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신임수장 중심 책임경영 강화
반도체 호황기 이후 성장기반 마련
후속 임원인사·조직개편 이목집중


황상준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조상연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이종명 DS부문 CTS 사장


최원준 MX사업부장 사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에도 이익 편중과 완제품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번 사장단 인사를 통한 경영체제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력사업의 실적 책임을 신임 수장에게 맡기는 한편 최고경영진은 파운드리·로봇 등 미래사업에 집중해 반도체 호황 이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구상이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7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두 사업에는 별도 수장을 배치해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삼성전자가 주력사업의 경영 책임을 분리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도 개선되지 못한 완제품 수익성과 메모리에 집중된 이익구조가 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인 107조4000억원으로,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을 차지한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로 메모리 판매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실적은 개선됐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사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켰다. 여기에 TV 수요 부진과 생활가전의 원자재·물류비 상승이 더해지면서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 간 수익성 격차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메모리 중심의 이익구조에서 벗어나 향후 업황 둔화에 대비할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주요 경영 과제로 떠올랐다..

◆ 미래먹거리 역량 집중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의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비메모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영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메모리사업부장직을 황상준 신임 사장에게 맡기고 파운드리 등 미래사업 강화에 집중한다. 황 사장은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모리사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와 수익성 관리를 책임진다.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상연 부사장을 시스템LSI사업부장으로, 이종명 부사장을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반도체연구소장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특히 글로벌 고객 대응 경험이 풍부한 조 사장에게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맡겨 신규 고객 확보에 무게를 뒀다.

비메모리 사업 강화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미국 브로드컴과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AI 반도체 위탁생산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진 교체 이후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엔비디아 의존도가 낮아질 경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고 브로드컴과 구글 등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객 다변화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첨단공정의 양산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삼성전자는 2027년 미국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 AI·고성능컴퓨팅(HPC) 반도체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전체 시설투자 84조4000억원 중 76조8000억원을 DS부문에 배정한 만큼 대규모 투자를 비메모리 사업의 이익 창출로 연결하는 것이 전영현 체제의 관건이다.

DX부문에서는 완제품 수익성 회복과 로봇 사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 노태문 사장은 스마트폰 사업을 최원준 신임 MX사업부장에게 맡기고 신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신설한 로봇경험(RX)사업추진실을 중심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로봇 사업은 개발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상용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 주중 사업별 실행체계 구체화

사장단 인사에 이어 이번 주 예정된 후속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에서는 사업별 실행체계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파운드리의 글로벌 고객 대응을 강화하고 시스템LSI의 신규 거래선 확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DX부문 역시 로봇 사업의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완제품 수익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후속 조직개편에서는 사업별 과제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와 인력 배분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창립 57주년 기념사에서 "최근 실적은 개선됐지만 우리의 기술 경쟁력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와 제조 효율 고도화, 완벽한 품질 확보와 수율 향상이라는 반도체업의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서울 집값 하락세 확산 속 송파는 0.42% '뚝'

용산·동작 등 25개 구 가운데 7곳 하락
대출 규제·높은 재건축 부담금 등 영향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강남에서 한강벨트까지 번진 가운데, 전역으로 확산할 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25개 구 가운데 7곳이 하락했으며, 송파구가 0.42% 내려 낙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와 강동구에 이어 용산·동작구까지 하락세로 돌아섰다.

개별 단지에서도 가격을 낮춘 거래와 매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84㎡는 지난달 31일 30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 최고 거래가 33억5000만원보다 3억2000만원 낮다. 호가를 29억원으로 낮춘 매물도 나와 실거래가격 30억원 선이 붕괴될 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한강벨트 지역인 동작구 흑석동 '명수대현대' 전용 124㎡는 지난 7일 32억원에서 9일 30억원으로 호가가 2억원 떨어졌다.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으로 매수 여력이 줄어든 데다 세 부담 우려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높은 부담금을 안게 된 재건축 단지 호가도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 9월 32억원에 거래된 '개포주공6단지' 전용 60㎡ 매물은 지난달 30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는 30억원 아래로 내려왔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는 다음 달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단지별 사업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가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를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69.0%로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부담은 피했지만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따라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오를 전망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먼저 재건축부담금이 매수 관망세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공사비와 사업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서다. 함 랩장은 "부담금을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가 거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는 매수자는 관망하는 반면, 급히 팔 이유가 없는 집주인은 호가를 쉽게 낮추지 않아 거래가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짙은 관망세 속에서 강남과 한강벨트의 낮아진 호가가 거래가격으로 굳어진다면 서울 아파트값 조정 압력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채리 기자 cr56@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퇴… 李 "신임 인선절차"

한성숙 국무총리 중심 수능 사후조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대응 논란 끝에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를 수락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사후 조치와 시험 관리 체계 개선을 챙기도록 지시했다.

최 장관은 22일 교육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능이 마무리된 만큼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험을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 수험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됐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사의를 수락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유정 수석대변인 명의의 공지를 통해 사의 수락 사실을 알리며 "신임 교육부 장관 인선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 교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능 사후 조치와 시험 관리 체계 개선은 한 총리가 맡게 됐다. 이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관련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했다.

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감독 인력 보강 등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수능 직전까지 대책이 보완되며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수능 이후에도 정치권과 수험생 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 적발됐다. 위급재난문자로 적발된 사례가 54건, 문자 발송과 관계없이 적발된 사례가 52건이었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활용한 사례도 5건 확인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각종 시험의 관리 체계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와대가 함께 살피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시험 중 문제지 촬영·외부 전송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유출 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최 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취임했다. 공주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세종시교육감 2·3·4대 교육감을 역임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기도 했다. 최 장관은 임기 1년여 만에 수능 대응 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가계부채·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이 인상 뒷받침 요인"

›› 1면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서 계속

수도권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 가계가 빚을 내 매수에 나서면 가계부채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금통위가 앞선 인상 이후 주택 구입자금 수요를 가늠하려면 전체 주담대 증가폭과 함께 일반 주담대와 거래 흐름도 살펴야 하는 이유다.

연말 가계대출에는 입주 일정에 맞춰 나가는 잔금대출이 변수다. 정부는 11~12월 수도권 아파트 약 1만6000호가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수도권 거래 둔화와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8·13 대책으로 집단대출 가용 금액이 늘어나고 4분기 입주 물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감소 요인과 증가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오는 26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 측면도 인상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